

글로벌 녹색금융 컨퍼런스

일시: 2025년 11월 27일 14:00 - 16:50

주최: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제1

금융 부문에서의 글로벌 택소노미와 이행

Dr.Ornsaran Pomme Manuamorn (World Bank)

발제2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정진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

발제3

기관투자자 관점에서의 그린 택소노미 활용

최진석 한국투자공사 팀장

발제4

기업 관점에서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사례

오재희 포스코홀딩스 리더

토론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좌장)

김경민 한국산업은행 센터장

최종원 NH아문디자산운용 이사

이광영 두산퓨얼셀 팀장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본부장

본 리포트에 담긴 정보에는 해당 ESG 이벤트의 콘텐츠가 포함되어있으며, 이 콘텐츠의 견해 및 보증은 해당 행사주최측의 책임으로 당사는 게재콘텐츠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 일체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의 텍스트, 이미지 및 레이아웃은 임팩트온이 저작권을 가지며, 임팩트온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본 저작물의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master@impacton.net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Executive Summary

본 행사는 녹색 분류체계(택소노미)를 중심으로 금융이 어떻게 녹색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의 방향과 역할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자리였음. 행사 전반은 글로벌 택소노미 확산과 상호운용성 과제, 국내 정책수단(녹색채권·녹색여신·2차 보전 등)과의 결합, 그리고 철강·연료전지 등 실물산업의 전환 조건과 데이터·공시·검증(MRV)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한 흐름으로 연결해 '한국 녹색금융의 다음 단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

key takeaway 1 택소노미가 자본배분 규칙으로 기능

- 택소노미는 지속가능금융 생태계의 일부로서 채권·여신·공시·감독 등 금융 인프라 전반에 결합되는 추세임
- EU 공시데이터와 투자상품 변화는 택소노미가 기업의 녹색 매출·Capex·Opex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투자 판단과 상품 설계로 직접 연결되는 흐름을 보여줬음

key takeaway 2 상호운용성이 글로벌 경쟁의 핵심 의제

- 국가별 택소노미가 빠르게 파편화되면서 비교 불가능성이 커졌고, 국제표준·지역 프레임워크 참조를 통해 공통 기반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중임
- 동시에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국가별 기준 차이가 곧 거래비용·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어, 한국형 분류체계의 국제적 정합성과 적용 가이드·데이터 인프라를 함께 끌어올리는 과제가 부각됐음

key takeaway 3 전환금융은 과정에 대한 신뢰

- EU 수준의 엄격 기준은 기술·인프라 현실(수소 공급 지연 등)과 충돌할 수 있고, 따라서 단계적 전환을 인정하는 기준 설계와 산업정책·금융시스템의 유기적 정렬이 중요해졌음.
- 연계 여신·연계 채권, MRV 부담 완화, 전문인력·거버넌스 구축 같은 '작동 조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녹색금융이 현장에서 확산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Dr.Ornsaran Pomme Manuamorn (World Bank)

금융 부문에서의 글로벌 택소노미와 이행

(글로벌 지속가능금융의 진척과 투자 격차)

신흥국·개도국은 기후 및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4조달러(약 5900조원) 규모의 자금 격차에 직면해 있음. 이 격차는 민간 자본을 대규모로 동원해야 할 긴급성을 보여줌. 지속가능금융 시장은 거시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확대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녹색·사회·지속가능·지속가능연계 채권 발행이 1조달러(약 1500조원)에 도달해 전년 대비 3% 증가했음. 이는 지속가능 채무상품에 대한 시장 복원력과 투자자 신뢰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함

택소노미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규제체계, 정책, 시장 관행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금융 생태계의 일부로 이해해야 함. 각국이 지속가능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구축하는 인프라에는 규제 프레임워크와 함께 택소노미 같은 정책 도구가 포함됨. 신흥국 중심의 진척도를 보면, Sustainable Banking and Finance Network(SBFN)의 2025년 진척지표 기준으로 다수 국가가 이미 이행 단계에 진입해 프레임워크를 출범했고 보고·준수 역량을 구축 중인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택소노미 확산과 파편화: 상호운용성 필요성 확대)

전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택소노미가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이며, 국가·지역·부문·목표·사용자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임. 유럽·중양아시아가 전체의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동아시아·태평양 2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 중남미·카리브 11% 순으로 분포함. 다만 택소노미가 확산될수록 기준의 파편화와 비교 가능성 저하 문제가 커지고 있어, 상호운용성이 글로벌 우선 과제로 부상함. 상호운용성은 택소노미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공통 원칙, 과학 기반 기준, 공유된 접근법을 통해 상호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연결돼야 함을 의미함

(환경목표의 확대와 전환금융의 부상, 그리고 향후 과제)

그린 택소노미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수자원·해양자원, 오염방지, 순환경제 등 6대 환경목표를 중심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임. 특히 기후변화 완화는 모든 관할권

택소노미에 포함될 정도로 중첩이 높고, 적응과 생물다양성 등 다른 목표도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

동시에 녹색금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난감축 부문에서 배출을 줄이는 전환금융을 위한 기준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흐름이 강화됨. 태국 택소노미 사례에서는 트래픽라이트(3단계) 체계를 통해 ①1.5도 경로에 부합하는 '녹색' 활동, ②특정 기한 내 실질 감축을 달성하는 '전환' 활동, ③기후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활동을 구분해 투자·감독·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택소노미는 녹색채권·녹색대출·전환채권·지속가능연계 상품 등 금융상품 설계와 발행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투자 심사에도 적용 가능함. 또한 금융·기업 공시, 채권 보고체계, 감독 도구, 정책 인센티브 설계로 확장되는 사례가 존재함. 다만 다수 국가는 자발적 적용을 택하고 있으며, 의무 적용 국가에서도 보증·검증은 아직 초기 단계로 규제 가이드가 더 필요함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택소노미 문서 자체를 넘어 구현 지침, 툴 키트, 보고 템플릿, 체크리스트, 사례집 등 지원 인프라가 필요하며, 데이터 수집·공시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핵심 과제임. 특히 중소기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 단순화, 역량강화, 데이터 시스템 투자,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의 대체데이터 활용, 중대성 고려 등 보완 전략이 필요함. 상호운용성을 높이면 국경 간 자본 흐름 촉진과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함

정진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2035 NDC 달성을 위한 전제: 민간자본의 유입과 기준 구축)

2050 탄소중립과 최근 발표된 2035 NDC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민간 자본이 녹색 경제활동으로 빠르게 흘러가야 함. 2035 NDC는 감축률 목표를 53~61% 범위로 제시했는데, 61% 감축 경로는 규제나 제도만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탈탄소 전환을 위한 민간자본의 협조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 패키지를 추진 중임

녹색금융이 확대될수록 비녹색 활동으로의 자금 유입 위험도 커지므로, 그린워싱 방지와 투자자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임. 이를 위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녹색여신 관리지침 등 금융수단별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정립하는 중임. K-택소노미는 EU 등 선도 사례의 엄격성을 참고하되 한국 산업구조의 특수성과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설계됐고,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돼 기술 변화와 활동 범위 확대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K-택소노미 운영 현황)

한국은 2021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 해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이후 산업계·금융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해 왔으며, 원래 3년 주기 보완 계획이었으나 기술 발전과 국제 논의 등을 반영해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지속 업데이트되는 상황임. 12월에도 개정안 발표가 예정돼 있음

K-택소노미는 ① 환경목표 기여 ② 심각한 환경피해 미발생 ③ 최소 보호장치 준수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기준·인정기준·배제·보호기준 등으로 구체화해 녹색경제활동을 판별함. 또한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수자원·순환경제·오염·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아래 현재 84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음. 이 중 재생에너지·무공해차량 등 77개 녹색활동과 과도기적 필요 활동 7개를 포함해 녹색 전환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체계로 운용 중임

K-택소노미는 단순 분류에 그치지 않고 정부 지원정책과 연계돼 '지원이 연결되는 기준선'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됐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산업은행·신한은행 등과의 2차보전 사업 등에서 녹색 지원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2024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해, 기업 자금조달의 핵심 수단인 여신 영역에서도 녹색 기준이 적용되도록 택소노미 연계 지침을 구축했음. 이를 통해 기업의 녹색 프로젝트·자산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임

(금융상품별 활성화 수단: 채권·여신·중소기업 접근성 확대)

직접금융시장에서는 K-택소노미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며, 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이자 지원과 함께 채권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자산유동화증권 연계 지원을 운영함. 간접금융시장(여신)에서는 2차보전 사업을 통해 녹색경제활동 투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공동 지원하고, 담보력이 약한 기업을 위해 보증을 제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적합성 판단 및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임. 외부검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환경성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를 운영해 발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그린워싱을 억제하는 구조임.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검토 비용·시간 부담이 존재하므로, 2차보전 사업 등을 통해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2024년 기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약 5조원, 2025년은 현재까지 4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전체 지속가능채권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고 한국형 녹색채권 비중은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됨

여신 분야에서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통해 대출이 녹색 프로젝트를 위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했고, 필요 시 외부검토기관을 활용해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게 설계했음. 또한 '녹색정책자금 활성화' 사업을 통해 대기업은 우대금리 일부의 최대 30%,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까지 지원해 탈탄소 설비투자에 필요한 대규모·장기 자금을 뒷받침하고 있음. 기업집단별 최대 2조원,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는 구조임

중소·중견기업은 채권 발행 자체가 어렵고 비용 부담이나 담보력 부족으로 녹색금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2023년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운영해 채권시장 진입을 돕고 외부검토 비용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2025년에는 약 3300억원 규모로 소부장 기업 비중이 큰 편임. 또한 담보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녹색전환보증'을 운영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보증기관에 출연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최진석 한국투자공사 팀장

기관투자자 관점에서의 그린 택소노미 활용

(글로벌 택소노미 확산 동향)

그린 택소노미는 다수 국가에서 마련돼 활용되는 흐름임. 한국은 2021년 최초 제정 후 2023년 개정판을 발표했고 지속 보완이 진행 중임. EU는 2020년 택소노미를 제정·법제화했으며 2022년부터 기업에 녹색 매출·투자 공시를 의무화했음. 중국은 2021년 개정판에서 석탄발전 제외 등 기준을 조정하며 EU와 공통분모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음. 일본은 공식 택소노미 체계라기보다는 부문별 전환금융 지침을 운영하는 형태임. 아세안은 2021년 초판 이후 2023년 버전2, 2024년 버전3로 발전시키며 석탄발전 폐지 기준 등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 전반적으로 약 50여 개 국가에서 택소노미가 존재하거나 추진 중이며, 국가별로 분류 체계와 적용 범위가 상이한 상황임

(EU 공시 데이터가 보여준 정착 신호)

EU를 중심으로 한 기업 공시 데이터를 보면 택소노미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음. 최신 공시 기준으로 EU 기업의 그린 매출이 약 910억유로(약 154조원) 수준으로 언급됐고, 그린 Capex는 약 310억유로(약 53조원)로 제시됐음. 전년 대비 그린 매출은 약 4%, Capex는 약 6% 증가했으며, 동일 기업 기준으로 녹색 매출 비중이 소폭 감소한 사례가 있더라도 Capex 확대가 병행돼 ‘현재 매출은 둔화하더라도 미래 전환 투자는 늘어나는’ 해석이 가능함

EU 규정에 따라 700여 개 기업이 매출·Opex·Capex의 택소노미 정렬도를 공시하고 있으며, 일부 분석에서는 Capex의 50% 이상이 택소노미 정렬로 채워진 기업 70여 개, Capex 70% 이상이 녹색이고 매출 50% 이상이 녹색인 기업도 40개 수준으로 제시됐음. 업종별로는 전력·유틸리티가 녹색 활동 비중이 높고 헬스케어·소비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관찰됨

(산업별 전환의 난이도 차이)

업종별로 택소노미 기준 충족의 구조가 다르게 나타남. 전력·유틸리티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녹색 활동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2024년 유럽 전력 생산의 47%가 재생에너지임.

자동차 업종은 전기차 판매가 녹색 매출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며, 전기차 수요 둔화 시 녹색 매출 증가세도 주춤할 수 있음. 산업재의 경우 저탄소 전환 활동이 일부 녹색으로 인정받지만 기술요건이 엄격함. 예컨대 EU 탄소노미에서 시멘트는 클링커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 0.72톤 이하 기준이 제시되고, 철강은 탄소포집·저장 등 엄격한 기술요건 충족이 요구됨. 이에 따라 투자자 관점에서는 전력처럼 ‘바로 녹색 전환이 가능한 업종’과 산업재처럼 ‘전환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업종’을 구별해 포트폴리오와 리스크를 설계해야 함

(금융투자 활용 사례와 정책 시사점)

탄소노미는 ESG 채권 시장과 강하게 결합되는 양상임. 누적 발행 규모가 2025년 1분기까지 약 6조1000억달러(약 9000조원) 수준이고, 최근 둔화 국면이 있더라도 시장 자체는 크게 성장했음. EU의 경우 2021~2025년 상반기 회원국·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의 90%가 EU 탄소노미에 부합하며, 분류 기준이 발행시장 신뢰의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 아시아에서도 2020년 이후 ESG 채권 발행이 급증했고 2022~2024년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2021년 탄소노미 도입 이후 기업 그린채권 발행이 이전 대비 678% 급증했음. 이는 명확한 분류 기준이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해 발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됨

투자 측면에서는 탄소노미 정렬 기업 중심의 지수·펀드 상품이 증가하는 흐름임. SFDR 개편 논의에서는 ‘환경 목적을 내세우는 상품의 포트폴리오 70% 목표’ 등 기준 적용 방식이 쟁점으로 언급됐고, 탄소노미 정렬 투자 비중 15% 이상일 경우 일정 수준의 세이프하버를 부여하는 방향이 논의됨. 한국 사례로는 K-탄소노미 도입 이후 ESG 채권 발행이 증가했고 특히 회사채는 도입 전 대비 700% 급증했음. 다만 이러한 성장이 전적으로 탄소노미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제도·수요·시장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동했을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는 접근이 필요함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가별 탄소노미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상호운용성 부족이 투자자에게 비용과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글로벌 공조가 중요함. 둘째, ISSB 등 다른 ESG 공시체계와 탄소노미가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정합성 고민이 필요함. 셋째, 시장 확대와 규제 엄격성 사이에서 실용성과 수용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과제임

오재희 포스코홀딩스 리더

기업 관점에서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사례

(EU 택소노미와 공시 의무화)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음. 그 중심에 택소노미가 위치해 있으며, 기업은 CSRD 공시 기준에 따라 자사의 경제활동이 택소노미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자본시장에 공개해야 함. 공시가 본격화되면 공공·민간 투자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자본이 친환경 분야로 집중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함. 금융기관도 SFDR 기준에 따라 친환경 성과를 공시하면서 이 흐름이 강화되는 구조임

EU 택소노미 기준에서는 친환경 활동을 ‘적격(eligible)’과 ‘적합(aligned)’ 두 단계로 판단하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친환경 활동으로 정의됨. 적격성은 해당 활동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택소노미 경제활동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목록에 없으면 적격으로 보지 않음. 포스코그룹의 사업 중 제조 분야(배터리 제조, 철강 제조), 에너지·전력 분야(태양광·풍력), 건설·부동산 분야(신축 건물 건설) 등이 적격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음

적합성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에 관한 요건으로, ①실질적 기여(정량·정성 평가), ②다른 환경목표에 대한 중대한 피해 부재, ③최소한의 안전장치(인권·노동·반부패 등) 충족이라는 3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더라도 다른 환경목표를 심각하게 저해하면 적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구조임

EU 택소노미는 2023년부터 EU 내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은 친환경 매출액, 친환경 투자비(Capex), 친환경 운영비(Opex)를 공시해야 함. 금융기관은 녹색자산비율, 녹색투자비율 등을 공시하게 됨. 이러한 공시가 확산되면 어떤 기업이 친환경 경제활동을 수행하는지 기업 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해지며, 투자자는 현재의 친환경 성과(매출)와 미래 전환 의지(투자비·운영비)를 구분해 판단할 수 있음. 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녹색채권 발행 시 친환경 사업으로의 자금 유입이 용이해지고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친환경 매출과 투자 비중이 낮은 기업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위험이 커지는 구조임. 결국 택소노미는 기업이 친환경 기업인지 판별하는 핵심 도구이며, 향후 기업가치 평가 기준으로도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철강 산업 적용 사례)

EU 탄소노미에서 철강 산업은 과도기적 활동으로 분류돼 있으며, 적격성은 철강 제조 활동 전반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적합성 판단은 공정별 탄소배출 원단위 기준 등으로 훨씬 엄격해짐.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EU가 제시한 공정별 원단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로 기반 생산체제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야 충족 가능함. 전기로 기반 공정의 경우에도 스크랩 투입비율 요건이 높아 스테인리스는 70% 이상, 일반 탄소강은 90% 이상 스크랩을 투입해야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봤음. 결국 철강을 생산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조공정을 전환해야 친환경성을 인정받는 구조임

유럽 철강사들의 친환경 재무 KPI 공시 사례를 비교하면, 적격 지표는 높는데 적합 지표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됨. 아르셀로미탈은 적합 매출·Capex·Opex 비율이 0%로 공시됐고, 향후 전략 달성에 따라 적합 KPI가 높아질 것이라는 방향성을 언급했음. 티센크루프는 적합 Capex 비율 41%를 공시해 수소환원제철 투자 등 전환투자를 적극 진행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전기로 기반 소형 철강사는 스크랩 90% 이상 투입으로 일부 매출이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줬음

2030년 이후 CSRD 공시가 확대되면 전 세계 철강사들이 이 지표를 공개하게 되고, 투자자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수평 비교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 포스코는 스테인리스 생산 공정에서 70% 이상 스크랩 투입을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도 병행 중이어서, 상대 비교에서 우위 요소가 있을 수 있음

(K-탄소노미 평가와 전환전략)

K-탄소노미는 큰 틀에서 EU와 유사하나, 적합성 기준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음. EU 철강 기준은 조강 1톤당 배출 원단위를 0.144 수준으로 제시해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야 충족 가능함. 반면 K-탄소노미는 국내 전력·산업 여건을 반영해 고로 기반 생산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등을 통해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접근임

이는 현실적이긴 하나 한국은 유럽처럼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가 충분히 정착돼 있지 않으므로, 탄소노미 기준과 정렬된 지속가능금융 시스템의 구축, 국가 산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토론

(김경민 한국산업은행 센터장)

산업은행이 2021년 ESG 전담조직을 만든 뒤 녹색금융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K-택소노미가 기반으로 작동해 왔음. 산업은행은 택소노미에 기반한 녹색 특별상품을 설계·운영하는 한편, 조직 내부가 실제로 움직이도록 KPI·종합평가 같은 성과체계에도 분류체계를 연동해 왔음. 실무 운영은 적합성 판단 전담팀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특별상품을 쓰려면 사전 적합성 판단을 받아야 하고, 일반상품이라도 녹색금융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취급 전에 적합성 판단을 거쳐야 하는 구조임

다만 이런 절차가 현장에서는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반응을 낳고 있으며, 특히 2024년 12월 마련된 녹색 여신 관리지침으로 녹색여신 인정에도 적합성 판단이 사실상 전제되면서 체감 난이도가 더 커졌음. 기업의 매출·Capex·Opex 등 택소노미 관련 정보가 검증된 형태로 공유될 수 있는 데이터·공시 인프라가 강화되면 금융권이 녹색금융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본부장)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 대비 53~61% 감축)가 확정되며 사회 전반의 노력과 막대한 자금이 요구되는 만큼 금융지원 역할이 더 중요해졌음. 녹색금융에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축으로는 녹색 분류체계(택소노미)와 NDC 감축경로가 있겠지만, 현재 분류체계에는 NDC 감축 정도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음. 녹색 여신과 녹색 채권이 녹색금융의 중심축이며,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아직 활성화가 낮은 연계 여신·연계 채권을 키울 필요가 있음. 이자비용 지원 같은 기존 지원책을 연계 채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의 정책 보완도 가능함

전환금융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고 국내도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정의가 불명확해 생기는 혼란이 일정 부분 정리될 수 있음. 전통적 녹색금융이 ‘결과 기반’이라면 전환금융은 로드맵에 따른 ‘과정 기반’ 지원에 가깝고,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로드맵·전략 요구가 필요함. 또한 EU는 업종별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반면 한국은 프로젝트 기반이라 활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MRV 부담을 낮추기 위해 ERP·회계 시스템에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탑재해 자동 보고되게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이광영 두산퓨얼셀 팀장)

택소노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체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지만, 실제 녹색금융으로 연결되는 단계에서는 현업이 제도를 잘 몰라 작동이 막히는 문제가 컸음. 연료전지 제품과 서비스 사업을 구분해 적격·적합 판단과 매출·Capex·Opex 지표를 산정했는데, 수소 기반 활동만 인정되고 LNG(천연가스) 기반 연료전지 제조는 인정받지 못해 충격이었음. 매출 지표는 41.2%로 양호했지만, SOFC 관련 대규모 투자 지출이 부적합 판정으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Capex·Opex 비중이 낮게 나왔고, 결과적으로 장기 관점의 탄소저감 기술 개발과 투자 전략을 더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다만 이런 결과를 녹색금융에 활용하려고 금융기관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2차 보전·금리우대 같은 연결 고리를 제대로 잡지 못해 경영진 의사결정까지 올리지 못했고, 결국 녹색금융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택소노미 결과를 사업전략·기후공시·재무영향 분석과 연결해 ESG위원회·이사회 등 공식 거버넌스에 반영하고, 자금조달 의사결정 과정에 제도적으로 편입해야 할 것임

(최종원 NH아문디자산운용 이사)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은 K-택소노미와 녹색채권이라는 상품·기준이 마련돼 투자가 가능해졌지만, 시장 내 비중이 아직 작아 활성화 단계로 보긴 어려움. 다만 2018~2023년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린 프리미엄이 약 4bp 존재해 발행사 입장에서는 금리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금리 인상기에는 프리미엄이 더 붙는 경향도 확인됨. ESG 통합전략의 핵심이 ESG·녹색활동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는 데 있지만, 아직 학계나 실무에서 포트폴리오 분석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만큼 연구와 방법론 발전이 필요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정리해 제출하더라도 다른 정책자금으로 더 낮은 비용 조달이 가능하면 녹색대출을 굳이 선택할 유인이 약하다는 현장 인식이 있으며, 별도 녹색대출 카테고리를 키우는 방식뿐 아니라 기존 대출상품에 녹색 요건 충족 기업에 추가 할인 혜택을 얻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음

조사 및 작성

임팩트온 고현창 연구원

jameskhc@impacton.net